

'대표 무죄' 한숨 돌린 민주... 특검법·검사 탄핵 '고베'

28일 본회의 '세 번째 특검법' 재표결·검사 3명 탄핵안 보고 상설특검 수사·채상병 국정조사 수순 밟으며 여당 압박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대외 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물론이고 당까지 짓누르던 사법리스크의 2차 고비를 일단 넘긴 만큼 다수 야당의 입법권을 활용해 대외 공세의 고삐를 다시 단단하게 거머쥔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통과를 반대하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당의 단일대오를 구축해 특검법이 다시 폐기될 경우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내친김에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주말 전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9일에도 본회의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만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얻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바로 김 여사 관련 사안에 상설특검 수사를 거론할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이번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고리로도 여권을 계속해서 압박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여야를 향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나라 흔들어"

SNS에 "다행이고 안심"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다행이고 안심이다"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

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메시지는 이날 판결을 계기로 이 대표는 물론 전임 정권에 대한 검찰의 각종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 일가 역시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국힘, 민생경제특위 띄운다

위원장 한동훈 등 10인 구성... "성장·복지 정책 개발"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동훈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특위는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의 민생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살피고 즉각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성장과 복지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며 "재정, 국토개발, 노동, 환경,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종합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7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인석 의원이 맡았다.

당초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 안이 검토됐으나, 정책위가 사실상 특위 관련 전반적 사항을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특위에 합류하지는 않기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위원으로는 유의동 여의도연구위원장과 관련 상임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김형동·박수영·최형두 의원이 위촉됐다.

외부 인사 중에선 지난 4월 총선 당시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당 격차 해소특별위원회 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교수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을 지낸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국가안보위원회(위원장 강선영 의원)와 실버세대위원회(위원장 이춘식 전 의원), 통일위원회(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급 당협위원장)도 구성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조인철 "AI 기본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광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이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기술의 개발·활용 촉진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광주시가 요청한 전담기관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법안에 명시됨으로써 광주의 AI 산업 육성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에 광주 AI 집적단지 활성화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지원 근거가 포함된 것은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큰 성과"라면서 "광주의 AI 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AI 기본법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광주가 국가 AI 산업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

여야 "반쪽 사도광산 추모식, 외교 실패"

문광위, 무능 외교 비판... '체육단체 관리·감독 권한 강화' 법안 처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나가타현 사도광산에서 '반쪽' 추모식이 열린 것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외교부가 외교 참사를 안긴 데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등은 일본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제대로 된 후속 조치 이행을 담보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부인할 수 없는 정부

의 외교적인 실패이자 무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사도광산 추모식에 정부와 유족들이 끝내 불참하게 된 사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라고 거들었다.

의원들의 발언을 들은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2015년 군함도에 이어서 두 번째 외교 참사가 벌어진 것으로, 무슨 말로도 핑곗거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간사와 협의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앞서 일본 정부는 전날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나가타현 사도광산 인근에서 추도식을 열었다.

하지만 한일 양측은 명칭과 참석자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일본 측이 주최한 추도식에 한국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별 체육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윤리센터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정보 허위 표기 등으로 게임사가 고의로 이용자에 손해를 야기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법안 29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